



EU REACH 시행에 따른 정부와 산업계 대응 전략

Strategy for REACH

유 호 /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사무관

1. 정부의 대응 추진경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 GLP 기관 운영 등 화학물질관리 주무부서로서 REACH 대응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부는 REACH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계 지원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REACH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REACH 대응을 위한 자체 대책반을 운영('05.7~)하면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작성 시범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06. 9월 『REACH 대응 추진 기획단』을 발족하여 REACH 제도 및 법령집, 관련지침(RIPs) 파악, Q&A 사례집 요약정리, 산업계 요구사항 파악 및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는 중으로,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 회원국 및 산업계 등의 REACH 대응 추진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산업계 대상 세미나와 홈페이지(<http://www.reach.me.go.kr>) 등을 통해 전파해 나가고 있으며, 업종별 전담전문가로 구성된 도움센터

(Helpdesk)를 운영('06.9~)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응답”, 방문상담 실시 등 화학물질별, 업종별로 on/off-line상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업계 스스로가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계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06.12~)으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제2차 산업계 대상 협의체 포럼('07.2.28에서 업종별로 협의체 기본골격을 최종 확정하였고, REACH 시행에 따른 전사(全社)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CEO 포럼을 수차례 개최 및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 GLP기관의 확충방안 마련 등 취약한 국내 인프라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분석·준비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2. 향후 REACH 대응 종합 추진전략

REACH 대응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EU 대응지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별로 맞춤형 등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취약한 국내 인프라를 감안하여



GLP 기관 등 위해성 정보생산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과 국내 유입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를 REACH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2-1. 관련 정보의 신속 파악·제공

EU 집행위 작업반 회의(CWG) 등 EU 공식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 하여 REACH 세부 이행계획(RIPs)추진사항 등 관련 정보와 EU회원국 및 일본, 중국, 미국 등 비EU 국가들의 REACH 대응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홈페이지·세미나 등을 통해 산업체 등에 상세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순회세미나('07.1.22~26, 중기청합동) 및 제2차 산업계 대상 세미나('07.2.27) 등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수차례(총 12회)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분야별 전문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REACH 변화사항 및 정부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07.5월부터는 REACH에 민감한 기업/협회를 선정하여 원탁행정이 아닌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여 업체별 애로·요구사항을 현장에서 파악 및 상담·지원해주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REACH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REACH가 발효되는 시점인 '07.6월경에는 OECD 국제전문가 및 일본 완제품관리

추진협의회(JAMP, Japan Article Management Promotion consortium) 담당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REACH 대응 동향에 대한 전문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집중 강화 KBS 라디오 공익광고(6월 한달간), 국정홍보처 전광판 광고(6월), TV 기획보도, CEO 간담회, 전문지, 홈페이지 등 활용할 계획인바, TV 등 언론매체 및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REACH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알리는 동시에 각종 REACH 홍보물(사전등록 매뉴얼, 각국의 대응사례집 등)을 수시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2-2. 도움센터(Helpdesk) 확대 운영

현재 운영중인 도움센터(Helpdesk)의 기능을 확대하여 산업계 요구(needs)에 신속하면서 업체 특성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방문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가 폭증할 법 시행시기('07.6)에 맞춰 업종별·분야별 전문가를 확충(5→15인)하여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REACH 대응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질의·응답 서비스를 위해 산업자원부 기업지원센터 및 중기청 콜센터와 연계운영하고 나아가 EU 집행위의 국가 도움센터(Helpdesk)와 협력하여 자체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EU에 문의하여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Q&A와 사례별·분야별 세부 안내 지침서를 발간·배포하고, 기업이 스스로 REACH 등록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대

[표 1] 각종 홍보물 및 안내서 개발·배포일정

일 정	내 용	계 획(안)
'07.01	REACH 홍보 소책자(브로셔)	홍보용(각종 행사시 배포)
'07.2,6,8,10,12	전문교육 자료집	교육용(현장배포, 홈페이지 게재)
'07.02	사전등록 매뉴얼	실무매뉴얼('07.2월 교육시 배포)
'07.03	REACH 법령집(국문 번역본)	실무매뉴얼
'07.05	GLP기관 세미나 전문교육 자료집	실무매뉴얼('07.5 교육시 배포)
'07.06	OECD 관계자 초청 세미나 자료집	교육용(현장배포, 홈페이지 게재)
'07.12	완제품 및 혼합제에 포함된 화학물질목록작성 시범사업 사례집	실무매뉴얼('07.12 교육시 배포)
'07.12	전략적 사전등록 안내서	실무매뉴얼('07.12 교육시 배포)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계 경보시스템”을 구축·제공('07.5~)할 예정이다.

2-3. 산업계 협의체 본격 구성·운영

REACH에서는 동일물질을 수출하는 기업간에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등록과 자료공유를 의무화토록 하고 있으며, REACH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동종업종 혹은 상·하위 사용자간 정보소통 및 공유 등 공동대응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계 스스로가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및 협력의 장(場) 마련을 위해 “산업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체는 상·하위 공급자간 활발한 정보소통으로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동일 업종별로 위해성 정보 공동생산과 대리인 공동선임, EU 컨소시엄 참여 등 공동 대응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 혹은 물질별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분야별 전문교육 및 전문가 지원 등 간사(facilitator) 역할로써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특히 업종별 대표물질에 대해

산업계와 공동으로 등록서류 작성 시범사업 추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매뉴얼 제공 등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지난 1차 실무자포럼('06.12.20) 및 전국 순회 세미나('07.1.22~26)에서 참석 희망자 및 건의사항을 취합·정리하여 제2차 실무자포럼('07.2.28)에서 자동차, 전자, 화학 등의 8개 협의체 확정된 후 개별 그룹토의를 통해 향후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아울러 관련 단체와 협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업종간, 물질별로 효율적인 협의체 구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업종별, 분야별 그룹화 및 분야별 소그룹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win-win) 전략 등이 포함된다. 또한 향후 동 협의체의 틀 안에서 주기적인 실무자 포럼과 CEO 포럼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2-4. 취약한 국내 인프라 확충

국내 유해성 평가를 위한 우수시험기관(GLP : Good Laboratory Practice)은



REACH 수요와 대비하여 극히 열악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GLP 기관의 확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내 GLP 기관을 REACH 요구 시험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시험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록서류 작성 시험사업을 통한 관련 전문가 양성 및 OECD 시험지침의 국내도입 등 운영체계 개선,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GLP기관 확충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대량 생산·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EU 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물질을 선정하여 “산업계가 공동”으로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DB화하는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험자료 생산시 OECD와 협력사업으로서 공동추진함으로써 국내 GLP 시험자료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계가 외국 GLP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EU 수준의 독자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산업계 협의체에서 논의·결정하는 체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3. 산업계의 REACH 대응방안

국내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복잡·광범위한 REACH 제도에 국내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 EU에서 제시하는 “EU 집행위 산업계 REACH 대응 권고사항(’06.9)”에 따라 산업계 스스로가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REACH 진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EU로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상·하위 사용자간의 관계로 REACH에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REACH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EU의 파트너와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충분히 대응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EU 집행위 산업계 REACH 대응 권고

<EU집행위의 산업계 REACH 대응 권고사항(’06. 9)>

- ※ How can you reach “REACH”?
- 1) Start today with analyzing your portfolio of chemicals!
(제품 내 화학물질 목록작성 즉시 착수)
- 2) Check the scope of obligation(의무사항 확인)
- 3) Identify your role & tasks under REACH(역할·임무 확인)
- 4) By when do tasks have to be fulfilled(임무 완수기한 확인)

사항('06.9)" 따라 자사 수출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확인하여 수입자를 통하거나 유일대리인 선임 등의 등록주체 결정하고 사전등록부터 본등록까지 대응방법(자체/콘소시엄) 및 준비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시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내·외 협의체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동일물질 수출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등록을 위한 철저한 준비(사전등록 준비 잔여기간 : 20개월)가 필요하다.

REACH 등록대상 화학물질은 그 양과 관계없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정해진 기간 내 사전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하여 대 EU 수출 품목 중 등록대상이 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IV. 맺음말

국제사회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며, UN에서는 화학물질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인 "국제적 화학물질관리 전략(SAICM)"을 '06년 채택한 바 있다.

REACH는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는 제도로서 기존 RoHS와 같은 제한된 환경규제를 넘어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이고, 이와 같은 추세

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비 EU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 전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생산·연구·환경·유통 등 다양한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사(全社)적 차원에서의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나아가 부품·원자재 공급업체 등 관련 산업계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제공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에 적극 참여하여 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국내 산업계가 스스로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장(場)으로서 "산업계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REACH라는 새로운 난관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국내 기업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

월간 포장계는 포장업계에 유익한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및 광고 문의는
(사)한국포장협회 편집실로 해주십시오.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